

“무차별적 지원, 지자체에 맡겨야” vs “민생예산 깎는 것”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

2023 쟁점예산

1 지역사랑상품권 전액 삭감

기재부, 코로나로 한시적 국비지원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발행해야

野 “여론조사 상 대다수 국민 원해 정부 삭감한 국고예산 전액 살려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예산이 정권이 바뀌면서 전액 삭감돼 심의 과정에서 거센 공방전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국고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18년 군산, 거제, 영암, 고성 이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시작됐다.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액과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액면가의 10%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내의 시장과 상점에서 쓸 수 있다. 올해는 국비예산 할인액의 4%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지자체가 부담한다. 2022년도 최종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30조원 규모 상품권 발행을 위해 국고 약 6000억원이 지원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된다.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할인율을 낮추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위기 상황에 긴급재정을 기조로 잡은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졌던 사업인 만큼, 내년부터 지자체가 발행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엔데믹(코로나19의 풍도병화) 이후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차별 지원 안 된다”...정부·여당, 예산 삭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상품권에 대해 “국가에서 전체적,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내년 75조원의 재원이 들어간다”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지역 상권에 도움 되겠다고 하면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해도 된다”며 지자체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재정 상태가 좋아서 지방교부세 교부가 되지 않는 경기

성남, 용인, 수원 같은 곳도 지역화폐를 통해 국가 재원이 내려가는 식의 집행은 맞지 않다”고 했다.

여당도 상품권 발행 국고 지원 삭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자체 특성과 여건에 맞게 상품권 발행이 이뤄져야지, 무차별 현금살포가 되면 안된다는 것.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지난 10월 전국 185개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본래 취지인 ‘지역 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보다 ‘사전 할인 및 사후 적립금 등에 따른 경제적 혜택 확대’ 때문에 상품권을 소비한다고 담당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주된 사용처가 종합소매점, 식당·제과점·카페 등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 편중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민주당, “삭감한 예산 전액 살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공개된 이후부터 ‘민생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국고 지원 전액 삭감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상임위원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책정한 정부가 삭감한 상품권 예산 전액 7050억원을 되살렸다.

박정 예결위 야당 측 간사는 지난 11

일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추 부총리에 게 질의하며 “경기도 인구가 2021년에 26.3%인데, 상품권 예산 반영 비중은 17.4%”라며 “여론조사 상으로도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예산”이라고 했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국고 예산을 전액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통과하면 본회의로 가겠으나 추 장관이 교부세로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다 살려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국고 지원 이후 그 정책 실효성에 대해 연구기관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던 사업이다. 조세재정정책연구원이 지난 2020년 9월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2021년 지방행정연구지에 실린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분석’ 논문은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해 ▲소상공인 점포로의 소비자 유입 유도 ▲지역화폐 이회키 카드, 현금 추가 소비 ▲소상공인 매출 증가 ▲특정 업종이 아닌 대부분 업종에서 효과 등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경기회복 관건은 ‘제로코로나’... 성장률 6% ↑ 가능성

차이나 뉴스 & 리포트

HSBC “경기 부양책 등과 시너지” 골드만삭스 “봉쇄풀면 증시 20% ↑”

‘제로 코로나’ 완화가 중국 경기회복의 가장 중요한 키로 떠올랐다.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만 없어진다면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까지 높아지고, 증시 역시 20%는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HSBC는 예상보다 방역 정책 완화가 앞당겨져 경기부양책과 시너지를 낼 경우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HSBC는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봉쇄가 장기화되면 내년 성장률이 4%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봤다. 현재 일부 봉쇄된 지역들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2% 달하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이 올해 돈 풀기에 나섰지만 봉쇄 장기화로 경기 위축을 우려한 시민들은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저축만 늘리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골드만삭스는 전면적인 봉쇄 해제는 중국 증시를 20% 추가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달 초 봉쇄 완화 소문



중국 베이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상점가가 폐쇄돼 있다. AP·뉴시스

만으로 급반등했다.

방역 정책 완화는 이미 시작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효율 제고와 경기 부작용의 최소화를 강조하며 ‘20개 방역 최적화 조치’를 내놨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 본토에서도 밀접 접촉자의 격리를 다소 완화하고, 관리구역 조정과 획일적인 방역 금지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체감 효과가 거의 없을 만큼 완화속도가 느린데다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남부의 제조업 중심지인 광저우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

을 봉쇄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수도인 베이징과 충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통제 조치가 강화됐다.

핀포인트자산운용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경제 회복을 피할 것이라는 것은 시사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향후 추가 완화 등 일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당황 수석경제학자는 “정책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적”이라며 “투자자와 소비의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방역 정책이 더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효과는 그 이후에 점차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라는 적어도 내년 3월까지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노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초부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조치는 공식적으로는 완화됐지만 실제로는 강화됐다”며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줄이고 국제선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를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으로의 투자를 늘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1면 ‘코픽스 4% 육박’서 계속

대출금리 상승 압력 지속 내달 주담대 최고조 전망

시장에서는 12월 주담대 금리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인상)을 단행하면서 국내 대출금리 상승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는 2008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인 3.75~4.00%까지 올랐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 역시 1%p로 크게 벌어지면서 한국은행도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10월에 이어 두 번 연속 ‘빅 스텝’을 밟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채권시장 불안까지 영향을 미쳐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9%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0월 한은의 빅스텝도 아직 코픽스에 반영되지 않아 연내 코픽스 4% 돌파는 확실시 되고 있다”며 “이달 한은이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수신금리 인상이 이어져 대출금리는 상승압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이 금리인상을 멈추기 힘든 만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7%대를 넘어선 시중은행 가계대출금리가 10%까지 진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